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

# 2022 경남형 자치경찰제

共感  
토론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Police Commission of Gyeongsangnam-do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

2022  
경남형  
자치경찰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Police Commission of Gyeongsangnam-do



## 共 感 토 론 회 개 요

- 주 제 : 경남자치경찰제의 미래를 탐색하다
- 일 시 : '22. 10. 18.(화) 11:00 ~ 12:00
- 장 소 : 경남도청 도정회의실(본관2층)
- 참 석 자 : 경남자경위 위원, 일선 경찰관서장, 유관단체장, 사무국 직원
- 내 용
  - (사례공유) 제1회 경상남도 자치경찰대상 우수사례 2건 / 각 5분
  - (주제발표)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 발표자 :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 (토의) 3명 / 각 5분

###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2부] 공 감 토론회	11:00~11:05	5'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황문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사회) 김효영 자치경찰 담 당 사무관
	11:05~11:15	10' 우수사례발표 제1회 경상남도 자치경찰大賞 사례① 거제경찰서 제1회 경상남도 자치경찰大賞 사례② 밀양경찰서	
	11:15~11:30	15' 주제발표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정국조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11:30~11:45	15' 토론 (좌장) 김진혁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토론) ① 손태성 경남자경위 정책자문위원 ② 유주성 경남자경위 정책연구위원 ③ 김영미 경사 함안경찰서 CPO	
	11:45~11:50	5' 기념촬영	
	11:50~12:00	10' 마무리	

## 도민이 감동하는 경남자치경찰



경남자경위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손태성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마치 씨앗에서 떡잎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뿌리가 나오는 것인데요. 1년을 평가하면서 지금은 떡잎이 나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차에서는 각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국을 꾸리고 시·도지사, 시·도의회와의 내적 외적 관계에 치중하는 일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데 맞춤을 위해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 그 역할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모든 여건이 성숙하였기 때문에 주민을 향한 2년 차가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떡잎에서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2년 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뿌리 내리는 단계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일원화하느냐, 이원화하느냐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의 안녕입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경찰로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경찰의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과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 그것과 수반된 112 지령업무, 학교폭력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업무, 유실물 처리 주치자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질서 업무 그리고 교통 혼잡과 같은 교통업무 이런 업무들은 완전하게 자치단체로 다 일원화해서 이관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 권한을 자치경찰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도 이해할 수 있고 국가경찰 입장에서 큰 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드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인데 법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가려면 재정의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자치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편성을 해서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제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가 1년 동안 워밍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동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업무협약에 있어서 치안 행정과 연계 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고군분투 결과 기대 이상의 몇 가지 성과를 내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1호 사업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홍보와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경남 대표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참여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민간 거너스를 통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을 융합하자는 주장에 힘을 얻고 지역의 시니어 인력을 운용하여 치안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안전과 재난·재해사고 등 주민 불안 요소를 점검·개선 활동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자치경찰 정책 홍보 네트워크 101 구성입니다.

도민으로 구성된 정책홍보단은 도민이 직접 자치경찰제를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가깝게 소통하는 경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찰, 도민이 감동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안착의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시·도 군과 공유하면서 이를 널리 전파 확산하고 나아가 경남형 자치경찰제 표준모델 구축을 통하여 민·관·경 공동치안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의 슬로건에 맞는 경남형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